



주간 통일정세

2013-5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 >>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연일 공개활동으로 '체제 안정' 과시(12/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 사업소와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 빈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함.
 - 지난 13일 장성택 처형 사실 공개 이후 인민군 설계연구소(북한매체 보도일 기준 14일)와 마식령스키장 건설 현장(15일) 방문에 이어 사흘 연속 현장활동 행보를 하였다고 밝힘.

- **北 김정은, 軍 사업소 방문...사흘째 활발한 현지시찰(종합)(12/16, 조선중앙통신)**
 - 김 제1위원장이 군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그가 지난 5월 27일에도 이곳을 방문해 어선 4척을 선물하며 "매 고깃배당 해마다 (물고기) 1천은 잡아야 한다"며 이를 달성할 경우 자신에게 편지로 알려 달라고 말한 바 있다고 전함.

- **北노동신문, 김정일 2주기 맞아 '백두혈통 계승' 강조(12/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인 17일 '백두혈통 계승'을 강조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결해 유일 영도체계를 굳게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함.
 - 신문은 1면 사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다'에서 김 국방위원장을 기리면서 "백두의 혈통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피줄기"라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백두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며 대를 이어 곳곳이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밝힘.
 - 이어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둘레)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곳곳이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함.

- **김정일 2주기...1주기 때와 닮은 점·다른 점(12/17,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2주기인 17일 오전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첫 순서로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에 대한 영상물을 내보냄.
 - 중앙TV는 작년 김정일 1주기에도 오전 8시부터 방송을 시작해 9시부터



는 김정은·리설주 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수산태양궁전 개관식을 생중계했으며 김 위원장 2주기 추모 분위기는 1주기 때와 형식은 비슷함.

● **김정일 2주기 추모대회…김경희 불참·'張 라인' 건재(종합)(12/17,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인 17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중앙추모대회를 실황 중계하여 보도함.
- 주석단에는 김 제1위원장의 원편으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총참모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등이 앉았고, 오른편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항일 빨치산 출신의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장 등 자리함.

● **北김정은 리설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김경희 불참(종합)(12/1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오후 2시 방송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리설주가 "김정일 동지의 서거 2돌에 즈음해 12월 17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함.
- 북한 매체가 리설주의 공개행사 참석을 보도하기는 지난 10월 16일 평양에서 러시아 21세기관현악단의 공연 관람 이후 두 달여 만이며 리설주는 최근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 여파로 거취가 주목됐지만 위상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조선신보 "北도발 전망은 제멋대로 꾸며보는 이야기"(12/17,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북한 체제의 안정을 부각하며 장성택 숙청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함.
- 신문은 이날 '평양레포트' / '유언 실행에 대한 인민의 지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 2년간 평양에서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정치도 안정됐다는 평가를 내놓았음.
- 더하여 최근 장성택 숙청에 대해 "유일영도체계의 확립, 강화의 계기점인 것과 동시에 '낡은 시대와의 결별', '악습에 대한 단죄'로 (북한 주민에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함.

● **北, 張 숙청과정 '김정은 이상화 노래' 연이어 발표(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8일 확인한 결과 노동신문은 장성택 실각설이 나온 지난 3일부터 장성택 사형 집행 보도 다음날인 14일까지 새로 만든 김정은 이상화 가요 5곡을 연달아 게재했음.
- 뉴스는 북한이 이달 들어 유독 이상화 가요를 특별히 많이 내보내는 것



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장성택 숙청으로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밝힘.

- 더하여 노동신문은 지난 3일 2면에 '우리 원수님'이란 제목의 김정은 우상화 가요를 게재했으며 다음날에는 3면에 실은 '내 조국 강산에 넘치는 노래'란 제목의 노래에서 "(김정은에 대한) 충성 맹세의 노래가 강산에 넘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선물·감사로 軍心·民心 잡기(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허철수 소속부대'에 현대식 어선들을 하사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부대가 '물고기 대풍'을 맞도록 어선뿐 아니라 어군탐지기, 냉동차 등도 함께 보냈으며 어선 전담식 참석자들은 김 제1위원장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해 어획 성과를 높여 "병사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할 것"을 다짐하며 김 제1위원장에 대한 맹세문도 채택함.

● **'김정은 찬가' 띄우는 北...문화예술 동원 본격화(12/19, 노동신문)**

- 최근 들어 연일 '김정은 찬가'를 게재하고 있는 노동신문이 19일에는 4면에 김 제1위원장의 '백두혈통'을 부각하며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시 3편을 나란히 실었음.
- '우리는 백두산 혈통밖에 모른다'라는 제목의 시는 "사상도 영도도 덕망도 담력도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우리 원수님만이 이으실 수 있는 백두산 혈통!", "백두산 혈통의 덕에 사는 인민 백두산의 피줄기를 잃고서는 못산다"라고 노래함.

● **北 전역서 '김정은에 충성' 편지 채택 모임 잇달아(12/20, 조선중앙방송)**

- 북한 곳곳에서 장성택 숙청을 지지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충성을 맹세하는 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0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이날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결의 편지 채택 모임들이 성(省) 중앙기관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힘.

● **北 매체도 "위대한 영도자"...김정은 우상화 총력(12/2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0일 북한의 공식 매체들이 김 제1위원장을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기 시작하는가 하면 주민들의 충성심을 고취하기 위해 선전화(포스터)와 노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보도함.
- 더하여 노동신문은 19일 김 제1위원장이 인민군 '허철수 소속부대'에 어선을 하사한 사실을 보도하며 김 제1위원장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라고 불렀으며 조선중앙방송도 '위대한 영도자'라는 수식어를 불



였다고 설명함.

● **北, 연일 '수령결사옹위' 롤모델 띄우기(12/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사설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근 방문한 동해안의 인민군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 직원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으로 치켜세움.
- 사업소 직원들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총돌격전'에 나서 수개월만에 목표를 달성하고 이달 초 김 제1위원장에게 이를 편지로 보고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답장을 보내고 최근 사업소를 다시 방문해 물고기 절임 창고와 냉동저장실에서 활짝 웃는 얼굴로 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음.

● **北 평양 곳곳 "김정은에 충성" 맹세 모임(12/21, 노동신문)**

- 북한의 수도 평양 곳곳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회단체들의 결의대회가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지난 19~20일 평양 천리마구역에서는 노동단체의 결의대회가 열렸고 강서구역과 만수대 언덕에서는 각각 농민단체와 청년단체의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당창건기념탑 광장에서는 여성단체가 결의대회를 열음.
- 이들 결의대회에는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이 참석했으며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상이나 사진에 헌화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다짐함.

● **北 '張 속청' 후속조치 지방으로 급속 확산(12/22, 연합뉴스)**

-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 이후 각 지방으로 속청작업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속청 후 각 도, 시, 군 당 위원회의 행정부에 모든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갔다"며 "이 부서에서 일해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함.

● **北 노동신문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 수호 방패"(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체제유지에서 군대의 역할을 중시하는 '선군정치'를 고수하겠다고 강조함.
- 신문은 '선군은 자주통일 위업 승리의 확고한 담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선군정치가 그동안 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의 '침략책동'을 막는 투쟁에서 위력을 발휘했다며 "선군정치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철의 방패"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의 침략책동과 남한의 '동족대결소동'으로 한반도가 전쟁이 발



생활 수 있는 최대의 열점지역이 되고 있다며 "선군정치는 앞으로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정의의 보검으로, 철의 방패로 위용 떨칠 것"이라고 밝힘.

- **北 강원도 원산서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식(12/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2일 원산시에서 김 주석과 김 위원장의 동상 제막식이 진행됐다고 제막식 장면을 녹화중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노동당 비서가 김일성 주석의 동상을 제막했고, 박봉주 내각 총리, 김기남 당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 원도희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을 제막함.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제막사에서 "김정은 원수님을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충직하게 받들며 그 어떤 천지풍파 속에서도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北 김정은, 6월 고위간부에게 '유일영도' 직접 연설 중문 (12/2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를 모아놓고 '유일 영도체계' 확립에 대한 연설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날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했고 조선노동당출판사는 이 연설을 소책자로 발행함.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이 책자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은 "수령님의 영도에 의해 역사적으로 내려오던 종파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당적 사상조류들이 극복됐다"며 "장군님께서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 수정주의분자들의 책동을 폭로 분쇄했다"고 밝힘.



■ **김정은동향**

- 12/16,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제313군부대 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 현지지도(12.16,중통·중방)
 - 황병서·마원춘(黨 중앙위 부부장) 동행
- 12/16, 김정은 黨 제1비서, 12.15 故 '김국태'(黨 중앙위 정치국 위원, 黨 검열위원장) 빈소 방문 및 화환 전달(12.16,중통·중방)
 - 최룡해, 김기남, 김원홍, 김평해, 리재일, 황병서, 마원춘 참가
- 12/17, 김정은·리설주, 12.17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17,중통·중·평방)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리영길,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강석주, 김원홍 등 참가
- 12/1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의료일꾼들과 노동자 '원옥화' 등 감사 전달(12.19,중방)
- 12/19,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허철수소속 부대에 고깃배·어군 탐지기·냉동차 등 전달(12.19,중방)
 - 고깃배 등 전달 모임, 12.18 진행 및 '김정은에게 보내는 맹세문' 채택
- 12/21,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을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1,중방)
- 12/22,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권영옥'(대동강구역 종합식당 노동자) 등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12.22, 중방)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사망(12.17) 2주기 관련 동향】
 - 청년학생들의 회고모임 '그리움은 끝이 없네', 12.15 리영수(黨 중앙위 부장) 참석 下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12.15, 중통·중방)
 - 재일본조선인 추모대표단(단장 : 오형진 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12.15 만경대 방문(12.15, 중통·평방)
 - 김정일 한 생의 업적을 칭송 및 김정은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어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이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중심의 단결' 촉구(12.17, 중통·노동신문·중방/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인민의 영원한 태양이다)
 - 중앙추모대회(평양체육관), 김정은 黨 제1비서 참가下 실황중계(12.17, 중통·중·평방)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軍 차수), 리영길, 장정남, 황순희, 김철만, 김기남(사회), 최태복, 박도춘,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문경덕, 최부일, 김창섭, 로두철, 조연준, 최영림, 현철해, 리병삼, 주규창, 김영대 등과 오형진(재일조선인역사연구소 상임고문), 최은복(재조선인총연합회 의장), 김철성(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 참가
 - 故 '김국태 장의식', 12.16 평양에서 국장으로 진행(12.18, 중통)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를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참가下 평양시 교외 애국열사능에서 영결식 진행
 - 조선노동당 출판사, '김정일 전집' 제5권(1962년 8월~12월 기간 발표한 연설·결론·담화 등 101건 노작 수록) 출판(12.18, 중통·중방)

나. 경제

- 北, 다시 '경제발전' 독려... '장성택 국면' 벗어나기(12/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1면에 실린 '연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용기백배, 신심 드높이 힘차게 전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국 각지 생산 현장에서 올해 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함.
 - 신문은 강원도 원산 경공업 공장, 평안남도 안주 절연물 공장, 평안북도 신의주 기관차대 등이 올해 연간 계획을 이미 달성하고 그 여세를 몰아 '생산 돌격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조선신보 "北의 진로는 경제건설·인민생활 향상"(12/2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0일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이 추진할 정책은 경제건설과 주민생활 향상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이날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 / 세계가 주시하는 조선의 진로'라는 글에서 숙청으로 단결이 강화된 북한의 진로는 명백하다며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받아 안은 감사문에도 명시된 것처럼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이라고 밝힘.



다. 군사

- **北,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건군 이후 처음(12/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평양에서 건군 사상 처음으로 조선인민군 수산 부문 열성자회의가 진행된다"고 보도함.
 - 중앙TV는 이번 회의가 군인들에게 수산물을 더 많이 공급하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군인들에 대한 후방사업(후생복지)을 개선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함.

- 기타 (대내 군사)
 - 조선인민군 장병들, 12.16 최룡해(軍 총정치국장/맹세문 낭독) · 리영길(軍 총참모장) · 장정남(인민무력부장) 등 참가하 '김정은에 충성 맹세모임(영도의 유일중심 · 결사옹위) 및 분열행진'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12.16, 중통 · 중 · 평방)
 - 인민군 장병들은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최고사령관을 단결 ·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더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결사옹위할 총정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 엄숙히 맹세함.(최룡해)

라. 사회문화

- **北 지난해 1인당 GDP 783弗...한국의 3.4% 수준(12/17, 연합뉴스)**
 -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7일 발간된 '통일경제 2013 겨울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783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7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의 783달러는 지난해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2만3천113달러의 3.4% 수준이며 방글라데시는 850달러, 미얀마는 835달러로 밝힘.

- **北 금강산 개발 '장밋빛' 청사진...콘도에 카지노도(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8일 접속한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 웹사이트에서 금강산관광특구 개발을 "단계별로 진행한다"며 '1단계 개발 총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보도함.
 - 금강산관광특구 개발 계획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나 대북 소식통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외부에 알려지긴 했지만 전체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는 북한이 2008년 남한의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2011년 5월 법으로 금강산관광특구를 설치하고 독자개발에 나서면서 출범시킨 여행사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관광 사업을 하고 있음.



- **北, 주말마다 스포츠경기…"분위기 전환용" 분석(12/2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주말마다 평양에서 인기 스포츠 경기를 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내각 체육성 관계자를 인용해 "선수들의 육체·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킬 목적으로 주말마다 체육경기들을 조직·진행하는 것을 정례화한다"고 밝힘.

- **北TV "평양 강동군서 신석기 무덤 발굴"(12/22,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김일성종합대학과 사회과학원 과학자들이 평양시 강동군 란산리 주현동의 자연동굴에서 처음으로 신석기시대의 무덤 유적을 발굴했다며 "무덤들에서는 '조선 옛 유형 사람뼈' 9개체와 질그릇 조각을 비롯해 많은 유물이 나왔다"고 보도함.

2. 대외관계

가. 일반

- **시리아 대통령, 北 김정은에 '김정일 추모' 전문(12/16, 조선중앙통신)**
 -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12월 17일)를 맞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아사드 대통령은 전문에서 시리아 국민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는 친선적인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굳건한 친선관계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완성차업체, 북한에 중형택시 300대 납품(12/18, 연합뉴스)**
 - 중국의 완성차 업체가 최근 북한에 중형택시 300대를 납품했다고 중국 언론을 인용해 18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중국의 자동차 전문 인터넷매체인 오토홈(汽車之家)에 따르면 중국의 순수 국산 브랜드인 화타이(華泰)자동차는 이날 네이멍구자치구 어얼뒤쓰(鄂爾多斯) 생산기지에서 북한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 수출용 택시 300대를 인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힘.

- **WFP "北 장성택 사건, 대북지원 활동에 영향 없다"(12/19, 미국의소리(VOA))**
 - 디르크 슈테겐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은 1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해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없다"라며 "그 사건은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고 말했다고 VOA가 19일 보도함.

- 슈테겐 소장은 북한 주재 유엔과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김정일 국방위 일장을 추모하는 등 평양의 분위기는 평상시와 같다고 전함.

● 벨 前 주한미군사령관 "北 급변사태 가능성 희박"(12/20, 미국의소리(VOA))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장성택 처형 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북한에서 급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20일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함.
- 벨 전 사령관은 이날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많은 에너지와 재원을 집중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힘.
- 더하여 그는 "김씨 일가가 지배하는 북한 독재체제는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도발에 대비하는 경계태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적함.

● 룩셈부르크, 15만弗 규모 대북 식량 지원(12/20, 미국의소리(VOA))

- 룩셈부르크 정부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국제 구호단체에 15만 달러(약 1억6천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룩셈부르크 정부는 지난달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에 15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북한 강원도 내 취약계층 4천명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밝힘.

● 북한, 중국과 경제·문화교류 확대 노력 지속(12/21,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21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허베이성 스톡자장(石家莊)시에서 전날 개막한 제2회 허베이성 특색문화상품박람회교역회에 참가함.
- 중국과 대만,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공예품 기업들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 북한은 전통주, 유화, 애니메이션, 우표 등을 10여 종의 상품을 출품함.

● 北 관광객 유치 '총력전'...물놀이장·승마장도 활용(12/22,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의 최신식 대규모 물놀이장과 승마장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전함.
- 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우리투어(Uri Tours) 인터넷홈페이지는 이달 9일과 12일 미림승마구락부와 문수물놀이장 내 각종 시설을 각각 소



개하며 관광객을 모집한다고 밝힘.

■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이 헬기(CH-47D) 14대를 우리 軍에 판매 하려는 것은 '남북대결을 더욱 부추겨 그를 구실로 새 전쟁도발책동을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며 '미국이야말로 긴장격화와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장본인'이라며 '자위적 억제력 강화' 강조(12.15,중통·중방·노동신문/대결을 노린 무모한 망동)

-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콰도르)' 참가 北 청년학생 대표단, 12.12 숙소에서 '원수님(*김정은)을 그리는 밤' 모임 진행(12.16,중통·평방)

· 한편, 12.11:12 운영된 '반제재판소'에서 '미국 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행위(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 등)를 기소 청구하고 심의했음.'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北통신, 대선 1년 차대통령 비난..."역사심판 받을 것"(12/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승리 이후 보인 국정 운영을 '공약 파기', '민생 파괴', '공포정치' 등으로 폄하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18대 대선 1주년 다음날인 이날 '달콤한 공약, 쓰거운(쓴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200여개의 대선 공약을 '남발'해놓고 지키지 않았으며 "박근혜의 지난 1년간 공약 파기 책동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민주, 민생의 철저한 폐허 지대, 불모지로 화했다"고 주장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단체 "南 정부, 철도파업 탄압은 폭거"(12/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북한의 근로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의 대변인 담화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초보적인 생존의 요구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찾기 위해 펼쳐나선 남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대변인은 이어 남한 정부가 파업을 '불법'으로 모독하고 파업 참가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파쇼적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유신 독재를 그대로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매체도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현상 소개(12/20, 연합뉴스)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대자보 안녕들 하십니까?'를 보며'라는 제목으로 북한 유명대학 중 하나인 평양 김책공업종합대 교수가 쓴 기고문을 실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함.
 - 기고문은 지난 10일 고려대 학생이 철도노동자 무더기 직위 해제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등을 거론하며 청년들의 정치적 무관심에 일침을 가하는 대자보를 붙인 사실과 이후 각계각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대자보 현상에 대해 설명함.

■ 기타 (대남)

- '개성공단 남북공동투자 제4차 회의(12.19,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진행 및 "개성공업지구가 재개된 이후 정상화해나가는 데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 토의,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12.19, 중통)
- '제1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과도르)' 참가 北 청년학생 대표단, 12.12 숙소에서 '원수님(*김정은)을 그리는 밤' 모임 진행(12.16, 중통·평방)
 - 한편, 12.11·12 운영된 '반제재판소'에서 '미국 등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행위(세계 도처에서 침략과 전쟁책동 등)를 기소 청취하고 심의했음.'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러 "6자회담이 한반도 핵문제 최적 해법">(12/16,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16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 차관의 면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6자회담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형식"이라고 강조했다.
 -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모스크바에서 모르굴로프 차관과 우 대표의 면담이 있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 활성화 문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행보에 발맞춰 북핵 6자회담 재개 중재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중국군 고위인사 "中, 北 핵포기 권고해야">(12/16, 연합뉴스)
 - 전 난징 군구 부사령관 왕홍광 중장은 16일 환구시보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 북한의 핵보유로 위협받는 주요 국가에는 중국도 포함돼 있다면서 중국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북한의 핵 포기를 권고하거나 최소한 제4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북한의 핵 포기 여부는 중국의 핵심이익에 연관돼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진행하면 발생할 심각한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말해야 한다"며 강력한 핵실험 만류를 주문했다.
 - 한편 그는 미국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에 대비해 한국, 일본, 미국 본토 서해안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중국의 전략 핵 반격 능력을 제한하고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중국의 전략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中, 북한 '핵보유국' 언급에 '한반도 비핵화' 강조>(12/18,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동신문이 전날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한 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반도 비핵화와 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유관문제 해결을 견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 이어 "중국은 유관 각방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조기에 6자 회담을 재개하고 북핵문제를 다시 대화·담판의 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



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중국이 북핵문제를 다시 대화·담판 과정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제조건 차이로 담보 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음.

나. 미·북 관계

● <“北 불안정 심해…깜짝 조치 더 나올 것”>(빅터 차)>(12/16, 연합뉴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확실한 사실은 정권 자체가 예측불허라는 것"이라면서 '장성택 처형'과 비슷한 돌발 조치를 더 쏟아낼 것이라고 전망했음.
- 차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장성택의 사형 사유로 '당·군 고위자 및 외부 세력과 반란 계획을 짰다'고 밝힌 대목은 반란음모를 자인한 것으로 내부 갈등이 심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함.
- 이어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당·군과 측근 인맥 모두 거리를 두고(alienating) 있음을 지적하며 그는 "이런 조치는 대담하지만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음.
- 이어 차 연구원은 "안전벨트를 맬 때"라며 "장성택 처형이 초조함의 신호이자 궁정 정치가 무너지는 뜻이라면 불안정한데다 핵까지 가진 이 불량 정권의 위협은 기존에 되풀이된 도발보다 훨씬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美 내년 10대 안보위협에 북한 포함”>(CFR)>(12/20, 연합뉴스)

- 미국외교협회(CFR)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2014 방지 우선순위 조사'(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14) 보고서에서 내년 최우선으로 억지해야 할 10대 글로벌 현안을 발간, 북한을 가장 우려되는 '1등급'(Tier 1) 위협으로 꼽았음.
- 북한 위기와 함께 시리아 내전과 사이버공격, 대 이란 군사공격,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테러 등이 같은 등급으로 평가됐으며, 아프간 사태 등 5개는 발생 가능성은 크지만 충격은 비교적 약한 위기로 분류됐음.
- 이 가운데 북한 위기의 경우 발생 가능성은 중간(moderate) 정도이나 충격은 높은(high) 수준의 5대 안보위협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최우선 억지 대상'으로 평가됐음.
- CFR가 매년 발간하는 이 보고서는 1천200여명의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 학자 등을 상대로 향후 12개월간 새로 발생하거나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위기나 분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다. 중·북 관계

- <中전문가 "최룡해, 김정은 직보자는 '바로 나' 밝혀">(12/16, 연합뉴스)
 - 홍콩 봉황망은 15일 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측에 '본인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보한다고 밝혔음을 보도했음.
 - 이 보도에 따르면 이날 봉황위성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중국 정치평론가인 두핑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방중해 왕자루이 중앙대외연락부장과 만났을 때 왕 부장이 '중북관계에 대해 현재 누가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하느냐고 묻자 최룡해가 '바로 나'라고 대답했다는 말을 권위 있는 소식통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음.
 - 두핑은 최룡해의 방중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최룡해의 권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음.

- <中 "김정일, 북중관계 발전 위해 중요한 공헌">(12/17, 연합뉴스)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평양에서 김정일 2주기 행사가 진행 중인데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김정일 총서기는 중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음.
 - 그는 또 "중조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인민의 이익과 부합할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중국은 계속 중북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정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에 대한 평가에서 김 위원장의 '중북관계에 대한 공헌'을 강조한 것은 결국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형성된 중북 간 불협화음에 대해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음.

- <中 환구시보 "北 정세변화 따른 中 이익 침해 막아야">(12/19, 연합뉴스)
 - 중국 환구시보는 19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등 북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나진항 부두 임대권을 비롯한 중국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가 결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환구시보가 나진항 임차권 등 중국 이권 보호를 강조한 것은 북한이 장성택의 죄목으로 석탄 등 지하자원을 헐값에 팔고 나선경제특구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매각했다고 비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됨.
 - 환구시보는 "중국인 일부는 북한이 나진항 부두 2개에 대한 50년의 임대계약을 파기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평양이 중북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의식을 지니고, 전 지도자인 김정일 시대 확정된 양국 경제구도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다"고 밝혔음.

● <장성택 처형 계기 '中 대북정책 수정론' 대두>(12/19, 연합뉴스)

-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홍콩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이 기존의 대북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음.
-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뉴켄 교수는 18일 홍콩 명보에 기고한 글에서 대북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에 대해 중국이 거리를 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장성택 사건이 북한의 붕괴를 가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교적으로 성숙한 국가라면 고도의 불확실성을 내포한 북한 같은 정권에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완충지대'를 위한 투자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왕상웨이 편집장도 지난 16일자 칼럼에서 "설령 일부 중국 고위층이 단기적으로 북한 정국의 안정을 위해 김정운의 고압 정치를 인정한다 해도 장성택의 죽음은 결국 중국 지도부에 김씨 정권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중국 당국에 주문했음.

● <"장성택 숙청으로 중북 황금평 개발사업 중단">(12/19, 연합뉴스)

-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 진행해온 북한 황금평 개발사업이 북한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으로 암초를 만났다고 19일 보도했음.
- 신문은 중북 황금평 합동 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장성택 숙청 직후에 북한 측 책임자가 소환됐으며 이를 전후해 공사도 중단됐으며 이 관리위의 중국 측 담당자는 "북한은 변화가 심해 기업유치의 당초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중국 정부에 보고했다고 전했음.
- 황금평은 중북 경제협력사업으로 2011년 6월 착공된 뒤 북한군이 황금평 주둔을 고집하는 바람에 개발이 일시 중단됐다가 장성택이 작년 8월 방중, 개발 활성화와 중북 합동 관리위 설치에 합의된 바 있음.

● <中, 北 대남위협에 "안정 해치는 어떤 행위도 반대">(12/20,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북한이 최근 대남 보복행동을 경고하는 통지문을 청와대에 발송한 데 대해 20일 "중국은 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고 밝혔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도 관련 보도를 주시하고 있다. 저는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각방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고 각방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음.
- 그는 또 "우리는 유관 각방이 현재의 형세 아래서 반드시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지역의 긴장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언행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마. 기 타

- <北 재추진 '신의주 특구'에 관심...전망 '불투명'>(12/19, 연합뉴스)
 - 황금평 개발 속도를 높일 것을 중국 측에 수차례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지난달 21일 각 도에 외자 유치와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의주 특구 재추진 방침을 밝혔다.
 - 북한은 이미 신의주 특구 개발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홍콩 대중화 그룹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한이 황금평 특구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황금평과 지리적 이점이 유사한 인근의 신의주 특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어 대규모 외자 유치를 꾀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중국 투자자들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에 외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해도 다른 경제특구들의 전례에서 보듯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크며 단기간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엔 北인권결의 합의채택... "모든 정치범 즉각 석방">(12/20, 연합뉴스)
 - 유엔은 18일(현지시간)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했음.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장성택 사형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 없는 즉각 석방, 강제 복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임.
 -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북한 측 대표는 이번 결의안을 '적대세력에 의한 날조'라고 비난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北도발 등 모든 가능성 대비키로>(12/18, 연합뉴스)
 -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진 뒤 양국은 최근 장성택 처형 사태로 북한의 정세가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도발 등의 가능성에 공동 대비키로 했음.



- 특히 이날 대화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사태 등 양국 동맹 및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음.
- 이밖에도 김 차관은 한·미·일 안보협력 가능성에 대해 "전략적으로 볼 때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해 미국의 의견을 들었고 우리도 얘기를 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음.

나. 한·중 관계

● <중국 외교부 "유해송환 업무 적극 추진">(12/19,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9일 한국과 중국군 유해 송환 합의가 이뤄진데 대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유해 송환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 외교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화춘잉 대변인 명의의 답글을 통해 "중국과 한국 양측의 유관 부문이 이미 우호협상을 통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쌍방은 한국에 있는 중국인민의용군 열사 유해 송환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상황은 유관부문에서 적당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월 류옌둥 부총리를 만나 중국군 유해 송환을 제의한데 대해 류 부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명했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독도영유권 주장은 몰역사적...철회해야">(12/17, 연합뉴스)

- 정부는 17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영유권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것을 항의하고,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음.
- 이어 조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발언과 주장, 몰역사적인 조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8일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회답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 21일 산케이신문 등은 일본 정부는 독도와 위안부 등 역사문제를 교과서에 기술할 때 정부의 기준대로 쓰라는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음.



- <日관방장관, 한국의 역사인식 시정 요구에 '난색'(12/20, 연합뉴스)>
 -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0일 한일 간 갈등요인인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역사인식은 나라마다 다른 것"이라며 "그런 생각을 갖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스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역사인식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문제제기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본에는 일본의 사고방식이 있고, 그것은 상호 마찬가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 이는 결국 일제강점기 관련 일본 수뇌부의 역사 인식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시정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됨.

라. 미·중 관계

- <미·중 '북한문제' 협의...中, 대북정책 수정 가능성>(12/16, 연합뉴스)
 -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15일(현지시간) "양국은 북한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 미중 양국 간 공식적 안보협의 채널은 수전 리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며, 양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를 놓고 공공연히 협의를 해왔으나 북한의 리더십과 내부 상황을 포괄하는 '북한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임.
 - 중국은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 미국과 북한문제를 공식적인 협의를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드러나지 않았음.
 - 다만 미국·중국 양국 모두 대북 정보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상황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무, 中에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말라">(12/17, 연합뉴스)
 - 마닐라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앨버트 델 로사리오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그 밖의 지역,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사한 일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케리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갈등에 적잖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최근 아시아 중시정책을 천명한 오바마 미 행정부는 상호방위조약 상대국인 필리핀을 전초기지로 삼아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앞서 마케칭 주 필리핀 중국대사는 최근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음.



- <중국, 쟈-10 전투기 40대 남중국해 파견>(12/17, 연합뉴스)
 - 중국 군사전문 사이트인 전침망은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함정과 대치상태가 발생하자 쟈-10 전투기 40대를 남중국해에 긴급 파견했다고 보도했음.
 - 미국 군함이 랴오닝호 선단의 내부 방어구역에 난입함으로써 양국 군함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쟈-10 40대를 남중국해에 보낸 것은 미중 간 대치상황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미군측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임.
 - 앞서 지난 5일 남중국해에서 랴오닝호 선대 소속 군함 한 척과 미 해군 순양함 카우펜스호가 460m 거리까지 근접하면서 대치상황이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中, 美 전역 사정권 동평-41 시험 발사”>(대만매체)>(12/19, 연합뉴스)
 - 대만 연합보 등은 미국 온라인 매체 '워싱턴프리비컨'(WFB)을 인용,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13일 산시성 우자이 우주미사일시험센터에서 동평-41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7월 24일 동평-41이 첫 시험 발사된 이후 두 번째 시험발사라고 보도했음.
 - 동평-41은 최대 사거리가 1만 4천km로 중국 동부에서 발사하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이미 실전 배치된 기존 동평-31은 최대 사거리가 8천km로 미국 서부 일부 지역까지만 도달할 수 있다고 함.
 - 이와 관련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전력화를 눈앞에 둔 단계라고 분석했으며 미국 정보 당국은 동평-41이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음.
 - 대만 언론은 중국의 이번 동평-41 시험 발사가 일본과 미국 등에 대한 군사적 위력 과시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음.

마. 미·일 관계

- <미국무, 日방위대강 지지 의사 표명>(12/17,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필리핀 외무장관과 회담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17일 채택한 새 방위계획 대강에 대해 일본이 역내 안정성 유지에 '더욱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것이며,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음.
 - 케리 장관은 일본 방위대강에 대해 "이는 무언가에 대한 갑작스러운 반응이 아니거니와, 누군가가 불편하게(upset)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일본은 더욱 현대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능력이 있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 계속 노력을 해 왔고, 그들은 얼마간의 시간 동안 계획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 <日 TPP 조기타결보다 관세유지로 방향전환>(산케이)(12/22, 연합뉴스)
 -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타결을 고집하지 않고 주요 산업의 관세 유지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고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국이 양국 관세 교섭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어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미국에 힘을 싣던 기존의 방침을 바꾸기로 했음.
 - 일본은 만약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전체 무역 품목의 관세 철폐를 요구한 기존의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협의를 계속하되 다음 각료회담에서 협상 조기타결을 위해 신흥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대폭 축소할 방이라고 함.

바. 미·러 관계

- <푸틴, 오바마에 '일침'... "NSA, 통제와 재정비 필요">(12/19, 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열린 연말 기자회견에서 "테러에 맞서려면 국가안보국(NSA)과 같은 조직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통제와 운용방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NSA의 무차별 도청파문 관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고를 했음.
 - 이어 NSA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전폭적인 지원 사실에 놀랐으며 테러 방지를 위한 감시는 필요하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AP등 외신은 전했다.
 - 푸틴 대통령은 또 NSA 불법 도청 폭로 후 러시아에 입시 망명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추가 폭로설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하며 "나는 스노든을 만난 적도 없고 러시아 정보 당국 또한 스노든에게 NSA 관련 질문을 한 적이 없다"며 러시아는 그를 보호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 중·일 관계

- <中, 日 '안보보장전략'에 "평화를 입으로만" 비판>(12/17, 연합뉴스)
 - 중국은 일본이 17일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채택한 데 대해 "우리는 일본이 단지 평화를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 행동으로 옮길 것을 희망한다"고 비판했음.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의 군사안전영역 관련 정책은 일본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전체 지역의 안전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고도의 주시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음.
 - 이어 "역사문제와 관련해 일본 국내에서 각종 부정적 동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일본의 유관 동향에 고도의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 <日 잠수함 8척·전투기 20대 중강 방침...中 겨냥>(12/17, 연합뉴스)
 - 일본의 새 방위계획 대강은 결국 중국을 겨냥해 잠수함과 전투기 등 핵



심 무기를 증강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해상자위대는 호위함을 올해 말 기준 47척에서 54척으로 늘릴 계획이며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호위함의 경우 현재 6척에서 8척으로, 잠수함은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것임.
- 항공자위대는 340대인 작전용 항공기와 260대인 전투기를 각각 360대, 280대로 증강할 계획이며, 육상자위대는 부대 운용에서 기동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전차부대를 줄이고 대신 타이어를 장착한 기동전투차 부대를 도입, 수륙기동단을 신설할 예정임.
- 실제로 일본은 방위대강과 중기방의 근간이 되는 국가안보전략(NSS)에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 해상영역에서 기존의 국제법질서와 양립하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기반해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려고 한다"며 우려의 시선을 담았음.

● <中 국방부장 "동중국해 문제 핵심은 다오위다오">(12/17, 연합뉴스)

- 인도를 방문 중인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논란과 관련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의 권리이며 동중국해 문제의 핵심은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문제"라고 강조했다.
- 홍콩 명보는 중국 관영 중국통신사를 인용해 창 부장은 16일 인도 국방부장과 회담에서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개별 국가의 항공기가 문제를 만들고 고의적으로 역내 대립을 도발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백해무익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음.
- 그는 중국은 남중국해의 혼란을 바라지 않으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며 모든 관련국의 공동 책임이라며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분명히 인식하고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 중·러 관계

● <“러-中 가스공급 계약 내년 2월전 체결할 수도”>(12/17, 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중국 공급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타르타스 통신은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이 17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2월 전에 가스공급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러시아는 자국 극동에서 중국 동북 지역으로 연결되는 '동부 노선' 가스관을 건설해 2018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380억㎡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중러 양측은 그동안 이 사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서도 가격 이견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왔음.
- 러시아와 중국이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극동으로부터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하려는 한국과 러시아 간 협상에서 한국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됨.



자. 기. 타

- <美정부, 'TPP 협상' 점검... '아시아 재균형'도 강조>(12/17, 연합뉴스)
 -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보좌진과 행정부 각료들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과 관련된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 백악관은 회의에서 TPP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이 협정이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견인에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 오바마 행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목표 아래 TPP 협상 당사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의지와 달리 TPP 협상은 일본과의 양자 협의 난항 등으로 연내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 미국의 참여 확대'라는 자료를 내고 미국의 미래 번영과 안보가 이 지역과 직결돼 있음을 다시 강조했다.

- <미국·베트남 "남중국해 분쟁 평화적 해결원칙 확인">(12/17, 연합뉴스)
 - 베트남소리방송(VOV) 등에 따르면 응웬 쩐 중 베트남 총리는 전날 저녁(현지시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을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베트남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의 입장을 지지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음.
 - 그는 아울러 TPP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서 미국이 개별국가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음.
 -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미국이 남중국해 주변지역의 해양안보와 안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모든 분쟁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표명했음.

- <日, 국가안보전략 수립...새 이념은 '적극적 평화주의'>(12/17,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17일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보 보장전략'과 앞으로 10개년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했음.
 - '국가안보전략'은 센카쿠를 둘러싼 중·일 대립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종합 방위력 강화·미일동맹 강화·영토보전 대처 강화 등을 담았으며, 새 외교안보 기본 이념으로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고 무기 수출 3원칙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밝혔음.
 - 한국과는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과 안보협력 기반 강화"를 강조하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입각해 외교노력을 다한다"고 명기했음.



-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아베 정권은 이번 안보전략을 토대로 내년 봄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위대강에는 중국의 군비 강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 낙도 탈환 등을 위한 수륙 양용부대 창설 등이 명기됐음.
- <WSJ "한국 등 아시아, 中에 반발해 日편에 서" 주장>(12/18,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 설정 등 무력과시에 반발해 미국과 일본의 편에 서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주장했다.
 - WSJ은 '중국의 괴롭힘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웃을 괴롭히는 것은 전략적 실수임을 납득하기 바랄 뿐"이라며 중국 지도부를 강한 어조로 비난했음.
 - 이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 기억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에 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논리를 펴면서 그 근거로 한국 사례를 들어 지난주 중국의 새 방공식별구역 안에서 일본과 합동 훈련을 실시한 것을 언급했음.
 - 또한 일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비행 자유'를 위한 협력 강화를 명시한 공동성명이 채택된 점도 거론하며 "중국은 자신들의 공격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이웃들을 뭉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다"며 "알아차리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일본·인도 해군 내일부터 합동훈련" <日신문>>(12/20, 연합뉴스)
 - 마이니치신문은 21~22일(현지시간) 일본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은 인도 남동부 첸나이 앞바다에서 합동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일본 해상자위대는 작년 6월 가나가와현 앞바다인 사가미만에서 인도 해군과 첫 공동훈련을 한 바 있으며 인도에서 양국의 합동훈련이 열리는 이번이 처음임.
 -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훈련에 대해 "해양 안보와 관련한 협력을 심화하는 일본과 인도에 대해 중국이 경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음.
 - 한편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1월26일 인도의 '공화국 기념' 일을 맞아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일본 총리로는 처음 인도군의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음.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러 북 노동자 쿼터 축소 잇따라"(12.2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노동자를 대거 파견해온 러시아 극동지역 정부가 잇따라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10% 이상 감축기로 결정해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0일 연해주 정부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미클루셴스키 주지사는 2014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2만 3천616명으로 최근 결정했으며, 이는 올해보다 13% 줄어든 수치
 - 외국인 노동자 감축 방침은 지난해 9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에이펙, 즉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후 지역 건설업계의 외국인 노동자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
 - 연해주는 러시아에 파견된 전체 북한 노동자(2만 1천447명, 올해 9월 기준)의 4분의 1이 넘는 5천600명이 몰려 있는, 최대 북한 노동자 파견 지역
 - 아무르주도 내년 북한 노동자 도입 쿼터를 올 해보다 4분의 1 이상 줄이기로 최근 결정했는데, 지난달 열린 북러 양국 간 노동자 교환에 관한 실무회의에서 북한 노동자 쿼터를 내년에 2천205개로 26%(785개) 감축한다고 북한 측에 통보
 - 북한 노동자 1천500명이 파견돼 있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주도 내년도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올해(2만5천900명)보다 14.3% 줄어든 2만2천200명으로 결정
 - 북한 당국은 외화벌이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러시아 파견을 적극 장려해 왔으나, 러시아 측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 감축 움직임이 북한 노동자 러시아 파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2. 북한인권

- '장성택 처형'으로 미국 내 '北 인권' 대응강화 흐름(12.16, 연합뉴스)
 - 북한 정권에 의한 '장성택 처형'이후 미국 내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미국 정부도 이번 사태를 국제사회의 인권과 인간존엄 등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대북 인권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주목
 - 15일(현지시간)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의회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에 의해 '장성택 처형'이 집행되는 과정과



- 절차가 북한도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이나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 뿐 아니라 더 많은 북한인사가 '비인권적인 방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미국 정부와 유엔을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할 것으로 보임.
- 한 소식통은 "북한이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발표에 의해 드러난 몇 가지 내용만해도 국제기준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문제삼을 수 있다"면서 "특히 장성택 처형뿐 아니라 그의 세력에 대한 추가적인 숙청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인권단체와 미국 의회 내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 **최경환 "北폭정 세계가 경악…北인권법 조속처리해야"(12.16, 연합뉴스)**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6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 "북한의 폭정과 극악무도한 숙청, 공포 정치에 대해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북한이 어떤 무자비한 일도 벌일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
- 최 원내대표는 "더 이상 북한의 인권유린에 침묵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잠자는 북한인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북한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 **시민단체, "장성택 처형 바로 잡아야"…유엔 청원(12.16, 뉴스1)**

- 인권운동단체 군인권센터는 16일 비정상적 사법 절차 아래 이뤄진 북한 장성택 처형을 바로 잡아 달라며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등 단체에 긴급청원서를 제출
- 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에서 그가 고문을 당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데 이는 북한정부가 맺은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과 사형판결 직후 신속하게 처형한 것은 유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
- 그러면서 "장성택 처형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마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 ▲고문과 기타 잔인한·비인간적·굴욕적 대우 및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고문방지위원회 등에 각각 긴급청원서 제출했다"고 밝힘.

● **반기문 "장성택 사형 인권 문제…사형지지 안해"(12.17,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장성택 사형 문제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도 북한의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되 선부르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
- 반 총장은 이날 낮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성택 사형 소식은



나로서도 극적이고 놀라웠다"면서 "그러나 한반도에 더 많은 긴장상태를 원하지 않는 만큼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또한 "장성택 사형은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
- 반 총장은 장성택 사형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선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지 판단하기 이르다고 언급

● **런던 北대사관 앞 인권탄압 항의 시위(12.18,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2주기인 17일(현지시간) 런던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재영 탈북자들이 북한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임.

● **황우여 "北, 정치사형 중단해야...인권법 제정 시급"(12.18,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파문과 관련, 공개처형을 비롯한 정치적 목적의 사형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북한정권이 국제 인권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언급
- 특히 "북한도 유엔에 가입한 이상 인권선언에 구속돼야 할 것"이라면서 여야 정치권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 제정에 뜻을 모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

● **조명철 "여야 지도부, 北인권법 통과 위해 각성해야"(12.18, 연합뉴스)**

-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18일 장성택 처형 등 북한의 인권유린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
- 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권력의 2인자였던 장성택마저 항변 한 번 못해보고 처형당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인간의 기본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면서 "일반 주민들에게 행해지는 처형과 감금, 노역 등 인권탄압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나게 한다"고 지적

● **민주, 새누리 북한인권법 공세에 "실효성 있게 제대로 하자"(12.18, 플리뉴스)**

- 민주당은 18일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 등과 관련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치는데 대해 "북한인권이라는 모자를 쓰고 생색을 내거나 정치적 선동만 앞세우는 태도는 북한인권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
-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향상을 위해 관련법을 제출해 놓았으며 "이미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 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과 윤후덕



-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이 있다고 설명
- 이어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생색내기용 법안이 아니라 실질적인 인권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
- 박 대변인은 또 "법 개정 논의 공세에 앞서 북한인권 호들갑이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향상에 관심을 두는 새누리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

● **인권위 "북한 장성택 즉결처형은 국제규범 위반"(12.18, 연합뉴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장성택을 즉결 처형한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우려하며 유엔 인권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보냈다고 밝힘.
- 서한에서 "이번 형 집행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규약'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북한이 앞으로도 자국민의 생명을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혹한 상황"이라고 언급
-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적 행위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유엔 인권 전문가들, 北 장성택 처형에 강력 경고(12.18, 연합뉴스)**

- 유엔 인권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이 적법한 절차나 국제적 인권 기준을 무시하고 고위인사를 처형한 것은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수많은 (비인도적) 처형 중의 하나라며 북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마르주끼 다루스만은 18일(현지시간)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체포와 군사 재판 그리고 처형 등 모든 일이 5일 이내에 이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북한의 다른 장소에서 여러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정보도 있다"면서 북한 당국에 즉각적인 처형 중단을 요구
- 유엔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이나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특별보고관인 크리스토프 헤인즈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최근의 처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
- 유엔 전문가들의 성명에는 유엔의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이나 대우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후안 멘테즈도 함께 서명

● **북한인권단체 "유엔에 장성택 처형 관련 청원서 제출 계획"(12.19, 아시아 투데이)**

-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이 북한에서 장성택 숙청 이후 대대적인 처형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함.
-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C) 사무국 국제팀장은 19일 20여 개 북한인권단체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김정은 규탄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에 유엔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장성택 처형 사건과 관련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권 팀장은 "장성택 처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북한은 1981년 가입)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엔 청원서에서 '심화조사권' 등 과거 사례에 비춰 장성택 숙청 이후 대량 숙청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할 것이라고 언급
 -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김정은 규탄 성명서에서 "1인 독재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무참히 처형하는 김정은의 공포정치와 인권탄압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북한의 극악한 인권만행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
- 유엔 北인권결의 합의채택... "모든 정치범 즉각 석방"(12.19, 연합뉴스)
- 유엔이 18일(현지시간) 북한내 모든 정치범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컨센서스)로 채택
 - 유엔은 이날 오후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확정
 - 결의안은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합의로 채택된 것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 북한과 중국, 벨라루스는 불참
 -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모든 정치범의 조건없는 즉각 석방 ▲강제 복송된 탈북민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상황 공개가 핵심 내용
 -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이 계속되고 있으며,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
 - 특히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아 공개처형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연좌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시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을 금지하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
 - 결의안은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유엔 북한인권사실조사위원회가 설립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당국이 위원회의 방북 조사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
 - 북한 쪽 대표는 이번 결의안을 적대세력에 의한 낱조라고 비난
- 與 "UN도 北인권결의안..북한인권법 시급해"(12.20, 머니투데이)
- 새누리당은 20일 유엔(UN)이 북한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우리도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표명
 -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무지막지한 인명 경시와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켜 북 인권상황



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서독이 동독이 했던 잔학 행위를 중앙기록보존소에 보관했듯, 우리도 북의 반인륜 범죄행위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북한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가 북한정권을 자극할까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다"고 강조
- 또한 세계에서 가장 참혹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협조를 촉구

● 홍문종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검토해야"(12.20,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장성택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을 처형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 살인을 심판하기 위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 이어 "북한인권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면서 "민주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등한시하고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언급
-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

● 일 "COI 종료돼도 북 인권조사 지원" (12.20, 자유아시아방송)

- 일본의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은 내년 초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할 의사를 밝힘.
- 일본의 대북인권운동 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일본인 납북자 후지타 스스무 씨의 남동생 후지타 다카시 씨와 함께 후루야 납치문제 담당상과 면담을 갖고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전함.
-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면담에서 북한측의 이와 같은 답변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언급
- 가토 대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방콕 사무소 등에서 북한인권 조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외무성 차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다음달 일본 외무상과도 면담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
- 그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유엔에 북한인권을 전담하는 전문가를 임명해 인권침해 관련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하며,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 후속조치로 북한의 반인도범죄 여부와 책임자 처벌 등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

3. 탈북자

- 경기 내년 탈북자 공무원 채용 확대...연말 인원 결정(12.16, 연합뉴스)
 - 경기도는 내년 탈북자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고 밝힘.



- 연말까지 시·군과 산하 기관 등의 수요를 조사한 뒤 안전행정부 지침을 받아 채용 인원을 결정할 계획이며, 특히 산하 기관 평가 때 탈북자 채용률을 반영하기로 결정, 아직 채용하지 않은 시·군도 내년 선발하도록 유도할 방침
- 도는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탈북자 전담팀을 두고 2008년부터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어 도내에 40명이 근무해,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채용 목표 21명을 훨씬 웃돌고 있음.
- 김문수 지사는 이날 탈북자 공무원 26명을 공관으로 초청, 그동안 근무한 소감과 어려운 점을 듣는 등 격려

● 유럽 정착 탈북민... "벨기에·네덜란드 단체 조직"(12.18, 노컷뉴스)

- 유럽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영국에 이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잇따라 단체를 조직
- 네덜란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지난 주말 '화란체류 조선망명자 협회'라는 이름의 탈북민 단체를 출범했으며, 이 단체의 유인임 사무국장은 창립목표를 "네덜란드 내 탈북 난민의 정착 지원과 난민 간의 친목과 교류, 북한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인권운동"이라고 밝힘.
- 또한 지난 15일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의 브뤼셀에서도 탈북민 단체 '재 벨기에 조선인 협회'가 설립
- 이 단체의 장만석 회장은 "벨기에에 정착한 탈북민 가정은 약 30가구에 모두 70여 명이며, 친목 도모와 통일문제, 북한이 지금 처한 상황에 관한 얘기나 정보를 나누기 위해 조직했다"고 밝힘.
- 이 두 단체는 이미 조직된 영국에 본부를 둔 재유럽 조선인 총연합회의 회원 단체로 가입

● 황우여 "통일 대비, 탈북자 미래지도자로 양성해야"(12.18,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통일미래포럼(대표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탈북민 정착지원업무, 어느 부처가 맡아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미래의 지도자로 만들어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
- 황 대표는 "체제를 극복하려면 남쪽에서 그런 것을 다 배우고 능통한 사람들이 북에 가서 개발하고 지도해야 한다. 다행히 탈북자 분들이 계시다"면서 "(북한 주민이) 남쪽에 내려가면 유익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표본을 탈북자들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탈북자 지원에 대해 황 대표는 "다른 체제에 있던 분들이 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이곳을 이해하고 적응할 기회를 충분히 드려야 한다"면서 "10년 정도 장학생 대우를 하자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언급

● 검찰, 전원 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 첫 적발(12.18, 연합뉴스)

- 전원 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처음 적발
- 울산지검 특수부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38)씨



를 포함한 탈북자 6명을 적발, 4명을 구속기소,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부부 2명은 지명수배하고, 히로뽕 600g을 압수했으며, 히로뽕을 팔려던 판매자 1명도 검거해 구속기소

- 이 히로뽕 규모는 소매가 18억원 상당에 달하고, 1만8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
- 탈북자들은 지난 9월과 10월 사이 히로뽕 20~65g을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숨겨 밀수입 또는 밀수출하거나 소지한 혐의
- 검찰은 지난 10월 탈북자가 히로뽕을 판매하려 한다는 시민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검찰에 따르면 2011년 태국을 경유해 입국한 이들은 탈북자 보호시설인 하나원에서 합숙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모의
- 그 후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 속에 히로뽕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밀수입
- 검찰은 캐나다에 있는 지명수배자 부부를 체포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계좌 거래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음.

● **옆집 수도계량기에 필로폰 보관 탈북자 부부 달미(12.18, 연합뉴스)**

- 서울 양천경찰서는 상당량의 필로폰을 옆집 수도계량기 함에 넣어 보관하고 투약해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탈북자 김모(30·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조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힘.
-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소재 모 아파트에 사는 김씨 부부는 아파트 복도의 옆집 수도계량기 함에 포장한 필로폰 40g을 보관하면서 지난 8월 두 차례에 걸쳐 맥주에 필로폰을 타서 투약한 혐의
- 이들은 옆집 주인이 수도계량기 속에 보관하던 집 열쇠를 찾다가 은박지로 싸 물건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달미가 잡힘.
-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보관한 필로폰 양이 워낙 많아 구속했으며 필로폰을 유통한 윗선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

● **정부, 張측근 망명설에 '짜기'... "분명히 사실 아니다"(12.19, 연합뉴스)**

-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 언론의 잇단 보도로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장성택 측근의 중국 망명설'과 관련, 정부가 19일 강한 어조로 망명설을 일축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국내 언론의 '북한 간부 중국 망명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 정부의 이런 태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는 취지의 기존 대응보다 부인 강도를 더욱 높인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아무리 정부가 얘기해도 믿질 않는 이들이 있어 이번에는 진짜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처럼 대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
- 앞서 외교부도 이날 장성택 측근 망명설을 거듭 부인했는데,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새롭게 제기된 장 부위원장 측근 등 70여명의 중국 탈출설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밝힘.



- 조 대변인은 장성택 숙청으로 인한 탈북자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외교부를 포함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 **'南北오가며 기밀누설' 재탈북자 김광호씨 징역3년6월(12.20, 연합뉴스)**
 - 한국에 정착했다 가족과 함께 입북한 뒤 재탈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김광호씨가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잠입·탈출 등)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
 - 김씨는 북한에 재적응하는 데 실패해 지난 6월 가족과 함께 재탈북했고, 지난 8월 한국으로 송환돼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기소
 -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밀을 자진누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한국 생활에 불만을 갖고 스스로 입북할 당시 이미 보위부 조사를 거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 재판부는 또 "북한에 갈 당시는 그곳에서 살 목적으로 갔고 그러려고 보위부에 협조했다고 보여 김씨가 강압에 의해 기밀을 털어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 **탈북자 또 재입북해 기자회견…"남은 냉혹한 사회"(12.20, 연합뉴스)**
 -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 남한을 또 비난
 -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은 20일 고려동포회관에서 남한에 정착했다가 북한에 돌아온 주민들과 좌담회가 진행됐다고 보도
 - 함경남도 함흥시에 사는 최계순(64·여) 씨는 좌담회에서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사는 언니를 찾아갔다가 '인신매매꾼'들에 의해 2011년 12월 남한에 끌려갔다가 얼마 전 북한에 돌아왔다고 밝힘.
 - 최 씨는 남한에 도착한 순간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으며 "남조선 사회라는 것은 인간의 정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사회"라고 비난
 - 이날 좌담회에는 재입북 탈북자 박정숙(남한에서는 박인숙으로 활동)도 함께 나와 "우리 주민들을 한 명이라도 남조선으로 더 끌여가기 위해 인륜도덕과 다른 나라의 주권, 국제법까지 위반하는 집단이 괴뢰패당"이라며 남한 정부를 비난
- **통일부 "탈북자 추가 재입북 사실로 판단"(12.21, 연합뉴스)**
 - 북한이 재입북 탈북자의 사례를 추가로 공개한 것과 관련, 통일부는 21일 성명, 나이 등 인적사항과 출국 기록 등에 비춰볼 때 사실인 것으로 판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남한에 정착했다가 북한에 돌아온 최계순(64·여)씨가 좌담회에서 남한을 비난했다고 보도했는데, 최씨는 2011



- 년 12월 남한에 들어왔다가 이달 초 출국한 것으로 확인
- 북한 매체가 재입북 탈북자의 사례를 보도한 것은 이번이 5번째
- 탈북자들의 재입북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최씨의 재입북 경위와 동기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정부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언급

● **탈북자 유인해 北강제압송 도움 준 탈북자 중형(12.22, 뉴시스)**

- 탈북한 북한 군인이나 일가족을 유인해 강제 북송시킨 탈북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탈북자들이 북한 당국에 인계될 경우 심하면 총살까지 당하는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채씨는 이를 인식하면서도 탈북 군인 2명과 탈북가족 5명 등 모두 7명을 유인해 북한에 인계해 줬다"며 "탈북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
- 채씨는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탈북 당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했다"며 "가족의 생명이나 자유만큼이나 타인의 생명과 자유도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이병기 주일대사, 일본인 납북자 가족 면담(12.20, 연합뉴스)**

- 이병기 주일대사는 20일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적인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씨 가족을 면담
- 이 대사는 이날 도쿄 시내 모처에서 요코타씨의 부모,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씨 오빠 등 납북 피해자 가족 5명을 만남.
- 이 자리에서 이 대사는 가족들의 사정을 들은 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전달
- 주일 대사가 일본인 납북피해자 가족과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6. 국군포로

- **국군포로 아버지 유해 들고 월북 시도...왜?(12.20, MBN)**
 - 탈북 여성 손명화 씨가 국군포로였던 아버지 유해를 지난 10월 맞이했으나, 그로부터 두 달 뒤 손 씨는 아버지 유골을 들고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어제 붙잡힘.
 - 손 씨는 우리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에 화가 났다고 말함.
 - 자신의 부친이 지난 84년 북에서 사망했지만 국방부가 사망 날짜를 전쟁 당시인 1951년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62년생인 손 씨는 아버지 호적에도 들어갈 수 없었음.
 - 손 씨는 이로 인해 국군포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북에 있는 형제가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에 밀입북을 시도
 - 국방부는 원칙대로 처리했을 뿐, 손 씨만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 국군포로 가족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
 -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뒤늦게 국군포로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힘.

7. 대북지원

- **미 NGO, 북중국경 고아원 지원(12.16,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중부 콜로라도 주에 본부를 둔 민간 구호단체인 알파 릴리프(Alpha Relief)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영역을 지하교인에서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에 있는 고아원들로 확대했으며, 북한의 꽃제비와 고아를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
 - 이 단체의 에리카 캐슬 대변인은 북중 국경지역에서 북한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을 지난여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
- **통일부, 2개 민간단체 대북 인도적지원 승인(12.17, 연합뉴스)**
 - 통일부는 17일 2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물품 반출을 승인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사랑재단과 어린이어깨동무는 평양, 원산 등지의 고아원 등에 분유, 이유식, 기초 의약품, 의료 소모품 등을 보낼 계획
 - 박근혜 정부 들어 승인된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누적 규모는 63억 3천만 원 규모로 증가
 - 통일부는 이날 승인된 단체 외에 일부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의사를 타진해와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
- **미 국제개발처, 내년에도 대북지원 없다(12.1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정부는 내년에도 북한에 대한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주의 지원을 할 계획이 없다고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가 밝힘.



- 국제개발처의 라파엘 쿡 대변인은 내년 9월까지인 2014 회계연도의 해외지원 계획에 북한과 관련한 내용은 없다고 전함.
- 쿡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
-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다른 정책 안건들과 연계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임.

● WFP "北 장성택 사건, 대북지원 활동에 영향 없다"(12.19, 연합뉴스)

- 장성택 처형 이후에도 북한에 대한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지원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디르크 슈테겐 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힘.
- 슈테겐 소장은 북한 주재 유엔과 구호단체 관계자들이 이번 사건에 반응하지 않고 인도주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추모하는 등 평양의 분위기는 평상시와 같다고 전함.
- 북한의 식량사정과 관련해 슈테겐 소장은 지난 몇 년간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곡물 수확량이 늘어난다고 영양 실조율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며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콩 수확량은 줄었다고 지적
- 슈테겐 소장은 올해 북한에 대한 주요 원조국의 지원이 줄어 WFP는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식량공급 계획의 15~30%밖에 달성하지 못했으며 내년 지원예산도 현재까지 10%만 확보한 상태라고 밝힘.
- 이어 WFP의 현재 재고상태로는 내년 1월에는 분유, 2월에는 설탕과 콩이 바닥난다며 "3월에는 7개의 영양과자 공장이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호소

● 룩셈부르크, 15만 달러 대북 식량 지원(12.20, 미국의 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정부가 지난 11월 말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가톨릭 구호단체인 카리타스에 11만 유로, 미화 15만천 달러를 기부
- 카리타스는 이 자금으로 강원도 내 취약계층 4천 명에게 식량을 나눠줄 계획
- 룩셈부르크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식량 지원사업에 미화 33만 달러를 기부
- 지난 10여 년간 대북 지원을 해온 카리타스는 올해 세 차례 북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평양시와 함경남북도, 평안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에 17개의 온실을 건설해 생산된 각종 채소는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공급



8. 북한동향

● 특이 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